

## 죽음의 공동체로서의 국가 - 총력전기 국민문학을 통해본 일본 제국\* -

배 개 화\*\*

### 요 약

총력전(1938-1945) 기간 동안,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인들을 지원병과 징병으로 동원하자, 조선 문화자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일본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 문화자들은 ‘국민문학’을 통해서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제국을 위해 전사하여 일본 제국의 진정한 국민임을 증명하고 조선 여성들에게는 이들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은 징병과 시민권-참정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선인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국민문학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죽을 특권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즉 ‘죽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보여줄 뿐이었다.

주제어: 일본 제국, 총력전, 시민권, 징병, 참정권, 국민문학, 죽음의 공동체, 제국주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2A1A01028225)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목차

1. 총력전기 일본 제국의 국민화 정책과 국민문학
2. 지원병제 실시에 대한 조선 문학자들의 반응
3. 조선 문학자들의 징병제와 참정권의 교환에 대한 기대
4. 조선인에게 징병제는 국민의 의무가 아닌 특권을
5. 죽음의 공동체: 국민문학에 나타난 일본 '제국'

## 1. 총력전기 일본 제국의 국민화 정책과 국민문학

일본 제국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총력전 체제에 들어갔으며 조선인들에 대한 국민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민족이나 국민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한다면, 총력전 기간 동안 조선인들을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상상했을까?

1937년 7월과 1941년 12월, 일본은 중국과 중일전쟁을, 그리고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각각 시작하였다. 1938년 일본 제국은 총동원령을 내리고 자신의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 조선도 총동원령의 예외가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병참 기지가 되었으며, 조선인들은 일본의 전쟁 수행에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되었다.<sup>1)</sup> 이 시기 일본은 본토 및 자신의 식민지 혹은 세력 범위 지역의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였으며, 이 때문에 이 전쟁은 '총력전'이라고 불렸다.<sup>2)</sup>

1)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 강화정책』, 『동방학지』, Vol. 138, 2007, 97면.

2) 1938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근대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전'(total war)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신력과 경제력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황이 확대 장기화 되고 결말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

일본 제국은, 조선인이 일본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문화적 동화정책(소위 황민화 정책)과 국민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선전 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문화적 동화를 목표로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사용, 창씨개명,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 제국은 언론을 통제하고 효과적인 선전을 위해 1940년 8월 조선의 민족 신문들을 폐간하고, 1941년 4월 모든 문학관련 잡지들을 '국민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국민문학'은 일본제국의 선전 도구로, 조선인들에게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계몽함으로써 일본의 전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비교적 초기의 연구들은 총력전 동안의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에 대한 황민화 정책을 인종주의-식민지인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비판하였다.<sup>3)</sup> 이런 관점의 연구자들은 황민화 정책을 '식민지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았으며,<sup>4)</sup> 특히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민족말살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sup>5)</sup> 국민문학에 대한 연구도 문학자의 친일 행위의 실상을 밝히는

---

에서 정신력을 효과적으로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내선일체의 정신이 필요하며, 조선은 일본제국 영토 중에서 대륙과 연결되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병참기지로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소련과의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會議錄』, 1938, 9-12面.

- 3) Mark R. Peattie, "Attitudes Towards Colonialism,"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ed. by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125.
- 4) Wan-yao Chou, "The Kōminka Movement in Taiwan and Korea : Comparisons and Interpretations,"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ed. by Peter Duus et 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40-69.
- 5) 임종국, 『조선민족 말살의 전략』,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286-313면; 윤해동, 『식민지 인식의 회색시대』,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51-58면; 강영심 저, 『군부의 민족말살정책』, 『일제 시기 근

데에 집중되었으며, 그 행위를 민족문화 말살에 동조하는 반민족 행위라고 비판하였다.<sup>6)</sup>

그런데 일제의 황민화 정책을 인종주의적 혹은 민족말살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왜 일제가 자기의 정책을 ‘국민화’로 선전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sup>7)</sup> 이에 후속 연구들은 일제의 전시 정책을 ‘국민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후지타니는 생명관리권력(bio-power)이라는 푸코의 용어를 이용하여, 일본제국이 총력전 기간 동안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훈육하고, 건강, 교육 그리고 복지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살폈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한국의 연구자들도 일본 제국이 조선인을 국민으로 관리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sup>9)</sup>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규율하는 것이 국민문학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이화대학교 출판부, 2008, 86-126면; 이준식, 『전시동원체제하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시 비평사, 2014, 259-266면.

- 6) 임종국, 『친일문학론』, 서울: 평화출판사, 1966; 김철, 『친일문학론: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광수와 백철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제8권 제1호, 1995, 6-24면;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서울: 대학사, 1998.
- 7) 조선 문학자 역시 일제의 정책을 조선인에게 국민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1940년 이광수는 의무교육실시, 창씨개명, 그리고 특별지원병령을 통해서 내선일체, 즉 조선인의 일본국민으로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광수, 『의무교육과 우리의 각오』, 『매일신보』, 1940.8.28.;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이경훈 편역, 서울: 평민사, 1995, 89-90면.
- 8) Takashi Fujitani,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 39. 그는 총력전기 일본의 정책은 지배가 아니라 통치였으며, 조선인을 군대 내에서 대등하게 대우하였고, 조선인의 지원 입대도 많은 경우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Ibid., pp. 48-50).
- 9) 김진균, 정근식 등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2003.
- 10)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서울: 역락, 2006; 차승기, 『문학이라는 장치: 식민지/제국체제와 일제 말기 문학장의 성격』, 『현대문학의 연구』, 44호, 2011, 179-209면;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협력 유형과 의미』, 『한

반면에 일제의 국민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도 있다. 이런 관점의 연구들은 일제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을 파시즘으로, 그리고 문학자의 친일협력을 파시즘에 대한 동조로 보았다.<sup>11)</sup> 특히 여성의 국민화에 대한 연구는 ‘군국 모성’ 혹은 ‘군국의 어머니’라는 당대의 용어로 조선 여성의 국민화를 설명하면서 이것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비판하였다.<sup>12)</sup>

사카이 나오키는, ‘제국적 국민주의’(imperial nationalism)라는 용어로 일제의 식민지인에 대한 국민화 정책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그는, 국가는 민족적인 차이를 초월한 국민이라는 주체를 만드는 토대이며, 일본 제국은 헤게모니적 지배를 통해서 식민지인을 제국의 신민(Imperial subject)이 되기를 욕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그에 따르면 ‘지원병 제도’는 이러한 주체화의 기술이 작동하는 예로서, 식민지인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죽음을 예상하는 전쟁 참여에의 결단을 내리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된다.<sup>14)</sup>

이상의 연구들은 국민의 자격(citizenship)을 법적인 것이 아니라 감시, 규율, 지배 그리고 관리라는 스키마를 통해서 [감정이나 행동의] 일치를 생산하는 권력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체화의 문화적

국현대문학연구, 22호, 2007, 231-279면.

- 11)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정치학과 문화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14호, 2000, 11-45면;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파시즘 체제하의 문학, 여성,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71-114면.
- 12) 이상경, 『일제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호, 2002, 203-241면; 신영희, 『植民地 朝鮮에서의 徴兵制와 “軍國母性”』, 『대동문화연구』, 59권, 2007, 403-441면; 공임순, 『가난과 국가, 군국모의 연기하는 신체정치』, 『동악어문학』, 61호, 2013, 71-114면.
- 13) Sakai Naoki, "Subject and Substratum: on Japanese Imperial Nationalism," *Cultural Studies*, vol. 14, no. 3-4, 2000, p. 515.
- 14) Ibid., p. 516.

과정”이라고 본다.<sup>15)</sup> 이것은 실제적인 시민권의 부여 없이도, 식민지인이 ‘동화정책’을 통해서 일본인과 문화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문화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이다. 사카이 나오키도 일본 제국이 조선인 지원병 중 누구에게도 일본 제국의 시민권(Japanese citizenship)<sup>16)</sup>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 할 때도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당시 친일적인 조선 엘리트들이 일본의 식민지인들에 대한 병력 동원을 이용하여 일본 본토인(proper Japanese)과 동등한 법적 지위, 즉 일본제국의 시민권을 갖고자 하였다고 본다. 이들은 병역 의무에 응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일본 본토인과 같은 시민권, 특히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1942년 5월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하자, 조선의 엘리트들은 참정권 획득을 기대하였다. 이런 기대 하에서 조선 문학자들도 국민문학이라는 것발 아래 조선인의 적극적인 전쟁 협력을 선전하였다.

하지만 조선인의 기대와 달리 일본제국은 참정권의 부여 없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많은 조선인을 병력으로 동원하였다. 그 결과, 총력전 기간 동안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 징집된 조선인 병사의 숫자는 213,723명에 이르렀다.<sup>17)</sup> 이는 일제의 국민화 정책의 목적이 식민

15) Aihwa Ong, "Cultural Citizenship as Subject-Making: Immigrants Negotiate Racial and Cultural Boundaries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Anthropology*, Vol. 37, 1996, p. 737.

16) 시민권(citizenship)은 "한 국가의 법에 규정되어진 의무와 권리에 상응하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로서, 개인은 시민권을 획득해야만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17)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 복무한 조선인 병사의 숫자는 213,723명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16,830명의 육군 지원병, 3000명의 해군 지원병, 190,000명의 징집자, 그리고 3,833명의 학생특별지원병이 포함되어 있다. 樋口雄一, 『戰時下の朝鮮民衆と徴兵』, 總和社, 2001.10, 99-108面: recited from Takashi Fujitani, *Op.cit.*, p. 46.

지 조선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장에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총력전 수행을 위한 일체의 정책은, 우에노 지즈코가 지적한 것처럼 국민이란 국가를 위해서 죽을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sup>18)</sup>

이 논문은 총력전 시기 ‘국민문학’이라는 선전문학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국민화 정책의 핵심은 첫째, 더 많은 조선인들의 병역동원에 있었으며; 둘째 조선 문학자들은 징병제와 시민권의 교환을 목표로 일본의 전시 정책에 협력하였지만, 일본은 식민지인에게 징병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런 조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문학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제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죽을 특권만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을 밝히겠다.

## 2. 지원병제 실시에 대한 조선 문학자들의 반응

일본은 1910년 조선을 병합한 후, 형식상 일본이 조선까지 연장되었다는 소위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하며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일본 제국 내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일본 시민(Japanese citizen)이 아닌 일본 국적인 (Japanese national)으로서 내적으로는 외국인으로 취급하였으며, 일본은 내

18) 우에노 지즈코는, 전쟁은 국민화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극한적 형태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국민국가가 군사력과 생산력의 증강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국민을 인구, 즉 병력과 노동력으로 환원한 경우 병역은 국민화의 열쇠가 되며, 이 때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과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전자만이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에노 지즈코,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이선이 역, 현실문화, 2014, 38-39, 44-45면.

지, 조선은 외지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법역으로 구분하였다.<sup>19)</sup> 이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인과 권리와 의무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그중 가장 큰 차이가 참정권과 병역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sup>20)</sup>

또한 일본은 내지와 관습과 문화 등이 다르다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이유로 일본의 법률을 조선에 직접 적용하지 않았으며, 총독이 제정하는 “제령(制令)”으로 법령을 대신하였다. 일본의 근대적 호적 법이나 민법은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적용되었다. 1939년 전까지 일본법은 법역이 다른 지역 간의 호적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여 조선인의 일본 호적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sup>21)</sup>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20년부터 참정권에 대한 조선인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동등하게 조선인에게도 제국회의의 중의원 의석을 배정할 것과 조선지방의회의의 설치를 요구하였다.<sup>22)</sup> 일본은 조선인의 제국의회 배정 요구에 대해, ‘내지연장주의의 이상에는 적합하지만 만약 조선대표자가 일반 표결에 참가한다면, 그 수가 가령 적다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향

19) 당시의 일본민법에 따르면 조선인은 조선 법역에 속하는 일본국적외의 외지인이며, 외지(조선 법역)는 식민지를 지칭하는 일본의 공식적 법률 용어였다. 이승일,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The Japanese Imperialist Policy on the '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Mass),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 34, 68-69, 75-76면.

20) 松岡修太郎, 『外地法』, 『行政法』, 1936, 3-5면; 이승일, 앞의 글, 77-78면에서 재인용.

21) 이승일, 앞의 책, 68-69, 75-76면;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9년 창씨개명을 결정하기 전까지 조선인의 일본성으로의 개성명은 엄격히 금지하였다; 미즈노 나오키, 『조선 식민지 지배와 이름의 차별화: 재지인과 혼동하기 쉬운 이름의 금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9, 2001.5, 172면.

22) 송규진, 『일제하 참정권 청원운동의 논리』, 『史叢』, 62, 2006.3, 5-34면; 김동명, 『일제하 '동화형 협력' 운동의 논리와 전개-취린의 자치 운동의 모색과 좌절』, 『한일관계사연구』, 21, 2004.10, 174-180면.



배 여하에 의해 의회의 형세를 좌우되어 내지 정치에 걱정스러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sup>23)</sup> 대신에 일본은 조선에 제한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1931년 도읍면(道邑面) 행정 단위마다 지방 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자치운동 세력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참정권 획득을 그들의 목표로 정하고 1936년부터는 징병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sup>24)</sup>

1937년부터 7월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제국은 조선인에게 병역을 부과하지 않던 정책을 버리고, 대신에 조선인을 병역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은 향후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선인을 병력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고려하였으며, 일차적으로 특별지원병 제도(1938)를 통해 조선인의 자원입대 허용을 추진하였다.<sup>25)</sup> 지원병의 선발 기준은 17세 이상 20세 이하의 남성으로 일본 육군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체격 등위가 우등이고, 사상이 견고하고 체구가 강건하고 또 정신에 이상이 없는 사람 중 소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였다.<sup>26)</sup>

특별지원병의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인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는 후생성을 설치하고 조선 청소년의 건강 및 체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조선인의 보건, 위생, 모자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에 관한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sup>27)</sup> 지

23) 朝鮮總督府, 「朝鮮ニ於ケル參政ニ關スル制度ノ方策」、1930, 9面;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v. 37,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0, 214면.

24)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주의 세력의 '징병제요망운동'가 전쟁 협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12, 191-238면.

25) 朝鮮郡司令部, 「朝鮮志願兵制度に關する意見」, (1937), 『密大日記』, 第4冊, 陸軍省, 1939, 1131面. 특별지원병제도는 “조선인에게 황국신민 의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장래의 병역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적 제도로서 조선인 청년을 지원자에 한해 현역군인으로 복무시키는 제도”이다: 위의 책, 1126면.

26)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諮問案 參考書』, 1, 1938.9, 47-48面.

원병의 자격 기준에 따라 소학교 졸업 여부와 체력이 증시되면서, 1939년 9월 총독부는 중학교 입시 시험 과목에서 기존의 학과 시험에 ‘체력’을 평가기준으로 추가하였다.<sup>28)</sup>

박태원은 소설 『골목안』에서 중학교 입시 문제를 다루면서, 지원병제도 실시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과 불안을 묘사하였다.

「은, 절뚝발이 병신이 학포 어떻게 들어가? 그, 다아, 옛날 얘기지. 인젠 정부에서 교육방침이, 똑, 학력버덤두 신체에 치중을 한단 말이야」

「은, 참 답답허긴……, 그럼, 또, 이 車가 바루 들어가는 걸 되나? 어여 그러지 말구 다시 한판 두세. —그 어째서 방침을 그렇게 했누? 그래도 신체버덤두 학력을 봐야 안 헐게야?」

「이 사람야. 신문두 못 보나? 그게 모두 후생성이 생기기 때 문이거든. 후생성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체위라는 게 연년에 못 돼가거든. 그래, 어차피 공부를 시킬 바에는 학력두 학력이지만, 체격 좋구, 몸 튼튼한 애를 뽑자는 게지.」<sup>29)</sup>

조선인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중학교 경쟁률은 보통 1:10이상이었다. 이 전까지는 입시는 주로 “학과 시험”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과 육체적 조건은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조선인 학부모형은 갑작스러운 중학 입시 제도의 변화 때문에, 중학교 입시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박태원은 소설에서 아이들의 불안한 미래와 함께 부모들의 우울감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27) 朝鮮總督府, 『半島民衆ノ體位ノ向上及生活ノ刷新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諮問 答申案 試案』, 1938. 9, 113-132面.

28) 『중학입학 시험의 체력 기준 작성-전력증강의 체육책』, 『동아일보』, 1939년 12월 15일; 이 기사는 체력 평가의 기준으로 행군, 투척, 조약, 반동, 수영, 부중, 교차력 등의 7가지가 있으며, 그 목적은 전력증강이라고 보도하였다.

29) 박태원, 『골목안』, 『문장』 제2권 제6호, 1940.7, 6-7면.

하지만 박태원의 소설에서 묘사된 하층 조선인들의 지원병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1938년 지원병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는 지원자의 수는 2,946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자와 입대자의 숫자는 급속하게 늘어나, 1943년에는 지원자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sup>30)</sup>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원입대자의 대다수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로써 일본 군인이 되는 것을 “조선 사회 내”에서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였다.<sup>31)</sup>

당시, 일본 제국은 자원병제도를 “조선인에게 황국신민 의식을 확실히 갖게” 함으로써 전시 정책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사카이 나오키는 지원병제가 식민지인이 민족적 차별을 넘어서 진정한 일본인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을 부추였으며, 자원병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일본 군인이 되어 죽음이 예상되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식민지인이 “우리 일본인”(we Japanese)이라는 국가적 공동체에 일원이라고 상상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이러한 나오키의 주장은 당시 지원병 제도의 의도와 잘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상층 엘리트들에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조선의 엘리트 집단은 조선인 청년들에게 자원병 입대를 적극 독려하면서도, 정작 본인 아들이나 친척의 군 입대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개별 식민지인이 지원

30) 近藤劔一(編), 『太平洋戰爭下の朝鮮及び臺灣』, 巖南堂書店, 1961.8, 33面.

31) 1941년의 자료에 따르면 자원한 조선인의 83%정도는 자산이 5,000엔 이하의 하위 계층의 아들이었으며, 상위 계급의 아들들의 자원입대 비율은 매우 낮았다. 朝鮮總督府, 『昭和16年度 陸軍特別支援者參考諸表』, 『第79回 帝國議會 說明資料』, 1941.2; 최유리, 『日帝 末期(1938年~45年)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5, 139면에서 재인용.

32) Sakai Naoki, op. cit., pp. 515-516.

병에 응하여 일본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조선인 엘리트들은 법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full Japanese citizenship)의 획득을 목표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였다.

### 3. 조선 문학자들의 징병제와 참정권의 교환에 대한 기대

근대 유럽국가에서 사람들(people)의 전쟁 참여와 시민권/참정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에서 “병역 의무는 시민권의 한 징표(hallmark)로서 등장했으며, 시민권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보증”으로 인정되었다.<sup>33)</sup> 징병제라는 의무와 시민권이라는 권리는, 국가가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자격을 군인-남성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인 문학자들은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된다면 그 대가로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의 전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이광수는 참정권과 징병제의 교환이라는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문학자이다. 1940년 이광수는 일본의 유명 문학잡지 『문학계』의 원고 청탁을 받아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과 징병 제도 실시를 요구하는 「동포에 부침」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이를 『경성일보』에 기고하였다. 여기서 이광수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천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다는 일본 제국의 통치 이념이 제국

33) Morris Janowitz, *Military Conflict*, Beverley Hills: Sage, 1975, p. 76; recited from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 234.

경영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법적인 차별은 국가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14, 5년 전에는 왜 나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시동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는데, 그 후 더욱 실제적이 되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추리하게 되었네. 즉, 만일 반도인[조선인]을 진짜 일본 신민으로서 평등하게 취급한다면 우선,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그 후 징병령을 조선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나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대어심(大御心)에 따라 조선이 통치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sup>34)</sup>

이광수는 일본 제국이 추진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문화[의 일체화]만으로 내선일체가 완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제국이 조선인을 평등하고 동등한 국민으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징병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 한다.<sup>35)</sup> 그리고 제국을 방호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의원 의석의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조선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6)</sup> 그리고 이광수는 조선인의 충성심과 병역 동원이 일본 제국의 승전과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제국이 조선인에게 징병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up>37)</sup>

34) 李光秀, 『同胞に寄す』, 『京城日報』, 1940. 1-10;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향』, 철학과 현실사, 1997, 15면.

35) 위의 책, 21-23면.

36) 위의 책, 24면.

37) 위의 책, 21-22면: “군이며. 조선은 일본의 대륙 경영의 병참기지라고 불리고 있네, 그것은 당연한 말이네. 그러나 단지 병참기지만으로 말해 버리면 마치 그

징병제 실시를 참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보는 전략은 이광수가 멀게는 1924년 『민족적 경륜』에서 주장한 자치권이나 참정권을 획득,<sup>38)</sup> 그리고 가깝게는 1936년의 징병제 요망운동 등과 맥락이 닿아있다. 특히 1936년부터 전개됐던, 최린 주도의 ‘징병제 요망 운동’은 참정권 획득을 위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병역 의무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9)</sup> 이 운동 세력은 서양의 근대국가들처럼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참정권도 자동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일본은 1938년 지원병 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만 해도 조선인에 징병제는 15년이나 2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sup>40)</sup> 그러나 1941년 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력 규모를 200만~3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일본인은 약 120만 명 정도밖에 동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족한 병력은 조선인들에 대한 징병제 실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sup>41)</sup> 1942년 5월 일본 의회는 조선인에게 ‘징병’ 의무를

---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처럼도 생각된다네. 조선반도의 땅이 단지 그 지리적 관계 때문에 병참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네. 조선 반도의 주민도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네. 즉 조선인의 마음이 일본의 대륙 경영 병참기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네. ... 다른 방향은 잠깐 제쳐두고 국방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선인에게서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경은 사변 전의 열 몇 배나 늘지 않았는가. 만주국만이 아니라 신생 지나까지 방호할 임무를 맡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적국이 될 개연성이 있는 상대 나라의 수는 늘고 위기는 하루하루 계속 심각화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 점점 더 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네. 더욱이 이번의 사변 때문에 지금부터 20년 후의 장정 수는 줄 것이 분명하네.”

38) 이광수,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1924.01.03.

39)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주의 세력의 ‘징병제요망운동’가 전쟁 협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12, 191-192면.

40) 旧陸海軍關係文書, no. 678, 別冊2, 朝鮮志願兵制度に關する; 최유리, 앞의 글, 131면.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3년 8월 부터 조선인에 대한 전면적 징병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소위 친일 문학자들은 징병제의 실시를 환영하고 이를 일본 제국의 시민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였다.<sup>42)</sup> 『국민문학』 주필인 최재서는 징병제의 실시로 인한 조선인의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내선일체 운동의 강령은, 조선인이 진실로 황국신민이 됨으로써 대동아 공영권에서 지도적 민족이 되고, 그 건설에 참여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그 목표를 의심할 사람은 없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한 가닥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반도인은 어떻게 하면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가? ... 또 어떻게 하면 반도인은 진정한 황국신민이 될 수 있겠느냐의 의문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과 이념에 대해서 단적 명쾌한 해답을 준 것이 이번의 징병제의 발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조선인이 대동아 공영권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해나갈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것으로 명실공히 반도인은 황국신민이 되고 대동아의 지도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이 뚫린 것이다.<sup>43)</sup>

이광수도 징병제를 적극 환영하는 소설 『군인이 될 수 있다』(『신태양』, 1943.11)를 발표한다.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화자는 14년 전부터 징병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징병제의 실시를 죽은 어린 아들의 소망 실현과 연결한다. 그가 징병제 실시를 주장했

41) 陸軍省兵務課, 『大東亞戰爭二件ヲ我カ人的國力ノ檢討』, 1942, 3-11面; 高崎隆治編, 『15年戰爭極秘資料集』, 第1集, 東京: 不二出版社, 1987.7, 1-30面에서 재인용.

42) 朝鮮總督府, 『徵兵制實施ニ對スル民情如何』, 『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4, 477-478面.

43) 崔載瑞, 『徵兵制實施の文化的意義』, 『國民文學』, 5, 6月 合号, 1942, 7-8面.

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병신 아이를 낳은 것 같은 비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비통함은 그의 큰 아들 ‘봉일’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으면서 더욱 커졌다. 10년 전 어느 날, 아들 봉일은 유치원에 갔다가 조선인은 일본의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얼마 후 봉일은 폐혈증에 걸려 일곱 살의 나이에 짧은 일생을 마쳤다. 봉일이 죽는 날 아침, 유치원 선생님이 문병을 오자, 봉일은 혼수상태에서 깨어 “선생님, 조선인은 [일본의] 군인이 될 수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몇 시간 후 임종의 순간에 봉일은 아버지에게 재차 “이번(다음 번)에도 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 때는 군인이 될 수 있어?”라고 물었다. 그 때 주인공은 ‘조선인도 군인이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10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징병제 실시 소식을 접하고, 아들에게 한 자신의 말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현실에 감격한다.<sup>44)</sup>

징병제를 참정권 획득의 계기로 인식하는 것은 친일적 문학자들 뿐만이 아니었다. 한 때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지도자 중 한명이었던 김남천도 그런 기대를 소설에서 표현했다. 그는 소설 『어느 아침』에서, 화자의 아이가 미래에 일본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의 아내가 해산을 하고 있는 동안, 북약산 약수터 휴게소에서 아들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라디오 체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온 후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아들의 미래를 상상한다.

막 국민학교 앞을 지날 때 교문에서 2학년쯤 되는 학생들이 서너 명의 훈도와 2열중대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나오고 있었다. …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먼지를 일으키며 거리 쪽으로 흘러가는 조그만 국민들의 행렬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

44) 李光秀, 『兵になれる』, 『新太陽』, 1943.11; 이경훈 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375-380면.



다. 그리고 다섯 명의 내 아이들이 그 속에 섞여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S선생님[민족주의자]의 막내도, K씨[친일파]의 손자도 저 행렬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sup>45)</sup>

장차 군인이 될 소국민의 행렬을 보면서 화자는 일본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동시에 맑스주의 문학단체의 지도자였던 김남천은 민족주의자인 S선생이나 친일파 K씨를 모두 같은 일본 국민으로써 긍정하게 된다.

아시아 시집으로 당시 “국민문학상”을 받은 친일작가 김용제의 소설 『장정』도 징병제 실시에 조선인들의 감격을 묘사하였다.<sup>46)</sup> 작가가 개인사가 반영된 이 소설은 그의 조카 쿠니모토(國本-나라의 근본)의 징병을 묘사하고 있다. 쿠니모토는 가난한 백모의 외아들로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14원의 월급을 받으며 여자사범학교의 급사 일을 시작하였다. 백부가 죽은 후에는 그의 수입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니모토는 제1회 징병의 적령인 17세가 되자 1944년 4월 가장 빨리 신체검사를 받았다. 필자는 징병에 응한다는 것은, 조선의 역사에서 대사건이며, 특히 자신의 사촌 동생이 군에 입대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에서 군인이 나온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후 그는 조카의 입영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고, 조카는 영화관에서 자신을 찬양하는 시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감격한다.

1942년 5월, 일제가 징병제 실시를 공포하자 많은 문학자들이 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김남천과 같이 일제의 전시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작가들도 이를 환영하는 ‘일본어’ 소설을 창작하였다.<sup>47)</sup> 이들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환영한 것은 자신의 아

45) 金南天, 『或る朝』, 『國民文學』, 1943.1, 162面.

46) 金龍濟, 『壯丁』, 『國民文學』, 1944.8, 66-76面.

이들의 장래, 즉 일본 시민권자로서의 장래를 기대했기 때문이다.<sup>48)</sup> 이런 이유로 그들은, 조선 청년들이 전쟁터에 죽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징병에 적극 응할 것을 설득하였다.

#### 4. 조선인에게 징병제는 국민의 의무가 아닌 특권

1942년 5월 일본 제국 의회는 식민지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하였고, 1943년 8월 조선에서 징병령이 시행되었다. 특히 1943년 8월 1일 징병령의 시행으로 1944년 4월 1일부터 8월에 걸쳐 제1회 징병검사가 실시되었다. 1944년과 1945년의 징집령에 따라서 약 19만 명의 조선청년들이 징집되었다.<sup>49)</sup>

하지만, 조선인이 일본 제국의 징병에 응해 입대하거나 심지어 일본 군인으로서 전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인으로서의 시민권과 이에 따른 참정권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1942년 5월,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할 때,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징병제와 시민권-참정권은 교환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sup>50)</sup>

47) 기존 연구에 따르면 김남천의 한국어 소설과 일본어 소설은 미묘한 주제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전시의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작가의 현실 대응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1942년에 출판된 한글소설 『등불』과 1943년 출판된 일본어 소설 『或る朝』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박태원의 『채가』에서 드러나듯이 작가의 가장(家長)의식의 강조는 친일협력에 대한 심정적 근절을 보여준다.

48) 이들이 일본의 전시 정책에 참여한 것은 당시의 “국난을 기회로 제국의 대 건설에 한몫 뽐낼 공헌함이 있어서 후비로 하여금 장래에 미안함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이광수, 『반도민중의 애국운동』, 『매일신보』, 1940.9.3-5; 김병걸, 김규동 편, 『친일문학작품선』, 실천문학사, 1986, 62면.

49) 樋口雄一, 앞의 글, 99-108면.

50) 당시 천황은 징병과 참정권을 교환할 것인가는 문제를 제기하자, 미나미 총독은

결국 일본 의회는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징병제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참정권 없는 징병제의 실시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을 방지하고, 조선인의 병역 의무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해, 일련의 선전선동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sup>51)</sup> 당시 조선총독부는 천황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일본 국민의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며 조선인에게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선전하였다.<sup>52)</sup> 이처럼 일제는 의무를 특권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조선인이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친일 문학자들은 징병제를 일본 국민의 지위에 대한 보증이라고 판단하고 일본의 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들은 조선인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본 군인으로 전쟁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라는 선전 문학들을 창작하였다. 1943년 8월 제1회 징병 검사 실시가 시작되자, 팔봉 김기진은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라는 시에서 “죽음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 열리었고나”라며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였다.<sup>53)</sup> 김용제는 병사를 징병에 응할 것을 독려하는 시에서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에게 “사내답게 가거라!

---

징병제와 참정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고, 만약 일본 제국이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생각한다면 향후 제한적 참정권은 부여할 수 있다고 천황에게 조언하였다: 御手洗辰雄 編, 『南次郎』, 南次郎 傳記刊行會, 1957, 472面. 척무대신 및 육군대신도 내각회의에서 징병과 참정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였다: 朝鮮總督府 情報局, 「(極秘) 朝鮮人に對する徵兵制施行準備に關する新聞發表案」, 1942.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v. 5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0, 535, 541면.

51) 朝鮮總督府, 「朝鮮同胞ニ對スル徵兵制施行準備決定ニ伴フ措置狀況並其ノ反響」, 1942.5;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v. 55,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0, 424-431면.

52) 위의 글, 426-427면.

53) 김기진,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매일신보』, 1943.8.1.

죽어도 좋을 일터로!”라고 말하며, 병사들 역시 “간다! 갑니다!”라고만 말하고, “갔다 온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묘사하였다.<sup>54)</sup> 서정주는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에게 쓴 수필에서 일본병사가 돼서 전쟁터에서 죽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형의 집행을 받은 몇 시간 전에 간수에게 태연하게 거울을 청했던” 일본 사형수를 본받을 것을 권고하였다.<sup>55)</sup>

징병제의 실시로 조선 여성도 선전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많은 여성들이 아들이나 남편이 징병에 응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병사가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미신이 농, 어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sup>56)</sup>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아들을 도주시키거나 소재를 숨기거나 호적 연령을 정정하거나 혹은 결혼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군 입대를 기피하고자 하였다.<sup>57)</sup>

이에 따라, 1942년 징병제 발표 이후부터 여성들에 대한 선전선동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sup>58)</sup> 활동의 주 내용은, 여성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징병령과 여성

54) 김용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매일신보』, 1943.8.3.

55) 서정주, 「스무살이 된 벗에게」, 『조광』, 1943.10; 『천일문학작품선집』 2, 실천문학사, 1986, 296면.

56) 事法省刑事局, 「朝鮮の徴兵制施行の閣議決定公表に關する反響調査」, 『思想月報』, 95, 1942年 6月, 18面.

57) 朝鮮總督府, 「徴兵制實施ニ對スル民情如何」, 『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4;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21,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0, 478면.

58) 이에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병사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미신적 사상이나 징병 기피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준비하는 동안 조선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事法省刑事局, 「朝鮮の徴兵制施行の閣議決定公表に關する反響調査」, 앞의 책, 18面. 조선육군사령부 특별위원회 역시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에 특별히 역점”을 둘 것을 건의하였다: 朝鮮郡司令部, “第2號 委員會 協議決定 事項,” 1942.4.24. (수정 5.1), ORKB #1204-2; recited from Hujitani, op.cit., p. 292;

문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인의 가족으로서, 군인의 아내로서, 또 군인의 어머니로서 과연 어떤 수양을 해야 할 것인가”를 토론하였다. 좌담회의 핵심은, 조선여성들은 일본여성을 본받아 혈연 관계를 개인의 것으로 생각지 말고, 아들이 군인으로써 국가에 목숨을 기꺼이 바치도록 준비시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잘 보살피며, 천황의 신하로서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9)</sup>

‘군국의 어머니’는 총력전 시기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여성 국민의 바람직한 이미지였다. ‘군국의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거나 남편이 전쟁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한 일본 여성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는 곧 조선으로 이식되었다. 조선 문학자들은 이와 관련된 일본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직접 창작하여 바람직한 여성 국민의 상을 계몽하였다.<sup>60)</sup> 이런 작품 속의 “일본 여성은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에 바쳤으며 속으로 슬퍼하였지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가나 하는 법이 전혀 없다.”<sup>61)</sup>

정인택의 일본어 소설 『かへりみはせじ(뒤돌아보지 않으리)』는 병사로 나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로 ‘군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sup>62)</sup> 조선인 켄(현)은 입대를 위해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도쿄의 벚꽃, 야스쿠니의 신사의 벚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

59) 조동식, 松岡瑞林, 『징병령과 여자문제』, 『조광』, 1942.11, 67-69면.

60) 『군국의 어머니』(박태원 저, 조광사, 1942.10), 『어머니의 힘』(김상덕 저, 남창서관, 1943.5), 『일본의 어머니』(강본건일, 역, 내선일체사, 1944.3), 『어머니의 승리』(김상덕 저, 경성동심원, 1944.9), 『여인전기』(채만식, 『매일신보』 1944.10.5-1945.5.17) 등과 같은, ‘군국의 어머니’상을 계몽 선전하는 한국어 창작품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61) 채만식, 『여인전기』, 『매일신보』, 1944.10.5.-18.

62) 이 제목은 “바다에 가면”〔海ゆかば〕의 한 구절이다: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산에 가면 풀에 덮인 시체, 천황과의 인연이기에 따를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한다: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곧 도쿄를 보여드릴게요. 벚꽃이 가득 핀 꽃의 도쿄를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는 어리둥절해서 껄껄 웃고 있는 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죠?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저는 황송하게도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질 거예요. 어머니는 유족의 한 사람으로 저를 만나러 도쿄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도쿄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sup>63)</sup>

어머니의 ‘도쿄 여행’은 곧 아들 켄의 죽음을 의미한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것을 말할 수 없으면 진짜 군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죽은 후에도 울거나, 한탄하거나, 평정을 잃거나 하지 말기를 간청한다. 이는 천황을 위해 전장에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울며 슬퍼하는 일본의 어머니는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소설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는 영광임을 강조한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켄은 “적의 무리 한가운데 깊이 들어가 어떤 장소를 점령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자신이 곧 전사할 것임을 어머니에게 알린다. 하지만 그는 부대원들이 모두 “죽어라는 명령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면서 이 군대의 한명으로 죽을 수 있는 자기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sup>64)</sup> 켄은 남태평양의 마리아나 군도에서 난파된 이호(伊號) 제67 잠수함장 大田正 대좌의 편지를 모방하여, 자기 어머니에게 10가지 유언을

63) 鄭人澤, 『「かへりみはせじ」』, 『國民文學』, 1943.10, 33-34面.

64) 위의 책, 50면.

남긴다.<sup>65)</sup>

이 소설은 조선인이 일본 군인으로서 전사한다면 일본인 전사자와 동등하게 국가의 예우를 받을 것이라며 조선인에게 제국 군인이 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조선인의 전사자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지는 것이다.<sup>66)</sup> 그러나 일본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인 전사자의 위패가 모셔진다고 해서 전사자나 그의 가족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조선인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설은 이것을 큰 영광으로 선전하며 조선인 청년들에게 기꺼이 전사할 것을 독려했다.

여성 작가들 역시,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설교하였다. 이점은 대표적인 여성 친일작가 최정희의 소설 “야국초”에서 잘 드러난다. 이 소설은 한 여자가 11살이 된 아들 승일과 함께 지원병 훈련소로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아이는 주인공인 여자가 유부남인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이다. 미혼모인 여주인공의 목표는 “여자로서는 실패하였지만 어머니로서는 성공하기”였다. 그것은 아들을 훌륭한 일본 제국의 군인으로 만들어, 일본의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주인공은 아이와 함께 지원병 훈련소를 견학하고, 훈련 방법이나 훈련소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듣는다. 이 견학은 아들 승일에게 일본 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머니 본인이 일본 군인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견학을 마친 여주인공은 일본여성 같은 강한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다. 예전에 승일은 갑자기 “엄마!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65) 위의 책, 51-52면.

66) 야스쿠니 신사에는 1926년 처음 조선인의 위패가 놓인 이후로 약2만 명의 조선인의 위패가 모여 있다 (『靖國神社問題資料集』, 國立國會圖書館調查立法考査局, 1976年 5月).

죽으면 엄만 울 거야?” 하고 물었다. 그 때, 여자는 금방 대답을 하지 못했고, 아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아들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승일은 기어코 들국화 몇 뿌리를 뜯었습니다. 들국화는 뽑혀서도 의연히 빨갛지도 않고 보랏빛도 아닌 묘한 색채를 빛내면서 아름답습니다.

“엄마,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어도 이 꽃을 보고 울지 않지?”

“엄만, 이제 울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니?”

“만약에 울고 싶어서 어떻게 해?”

“글썸다 울고 싶어서 승일이 해줬던 말을 생각해내고 울지 않도록 노력할게.”<sup>67)</sup>

이처럼 여자주인공은 아들을 훌륭한 일본 군인으로 키움으로써, 또한 아들이 죽어도 울지 않는 일본의 어머니처럼 됨으로써, 그녀는 제국 국민의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다.<sup>68)</sup>

이상에서처럼 조선인에 대한 징병 실시와 함께 조선인에 대한 선전선동이 강조되고, 이를 주제로 한 조선 작가의 한국어 및 일본어 작품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국민의 의무는 전쟁터에서 천황을 위해 군인으로서 기꺼이 죽는 것이며, 조선 여성들도 일

67) 崔貞熙, 『野菊抄』, 『國民文學』, 1942.11, 145面.

68) 이 작품은 동시에 젠더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야국초』의 화자-주인공은 여자이기 때문에 군인 생활을 알 수 없었고 군인생활을 알 수 없기에 아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울 수 없었다. 하지만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조선 사람 중에 군인 생활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점에서 조선인 남성과 여성은 일본 국민이 되는 길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따라서 아들을 훌륭한 일본 군인으로 키움으로써,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도 울지 않는 일본의 어머니와 같이 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제국 국민의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총력전기 '제국 국민'은 반대 성에 대한 인정투쟁의 장이 되었다.



본 여성들을 본받아서 아들 혹은 남편의 입대를 격려하고 그들의 전사를 영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 5. 죽음의 공동체: 국민문학에 나타난 일본 ‘제국’

총력전 기간 동안 일본의 국민화 정책은 식민지인에게 일본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권리는 제한함으로써 식민지인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는 일본 제국과 민족적 차별을 철폐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 곧 시민권을 얻으려는 식민지인의 협상의 장이었다. 일본 제국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문학’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삼았지만, 조선인 역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당시 다수의 친일적 조선인 엘리트들은 전쟁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 즉, 일본제국의 시민권(full-citizenship)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1942년의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를 결정하자, 조선의 엘리트들은 이를 일본인과의 ‘차별로부터의 탈출의 계기’로 인식하였으며, 일본인과 동등한 정치적 참정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인의 병역동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권-참정권 요구의 빌미가 될 징병제 실시를 주저하였다. 이것은 조선인이 일본 제국의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제국은 조선인이 병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참정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 답은 병역과 참정권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황이 점점 일본에게 불리해지면서 일본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1943년 11월

27일, 미·영·중 3거두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전후 처리 방침을 발표하고, 전후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sup>69)</sup> 소위 “카이로 선언”으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할 경우 식민지 조선을 상실할 운명이었다. 특히 1944년 후반기로 가면서 전세는 일본군에 더욱 불리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쟁 승리에 필사적으로 되었고 조선인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1945년 1월의 국민문학 좌담회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 일본 문학자가 “조선이 독립하면 앞으로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일본은 조선을 놓아주고도 대동아의 맹주가 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내선이 떨어지면 양쪽이 모두 망한다.”며 조선인의 적극적 전시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측의 차재정은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서 전면적인 무차별” 수준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sup>70)</sup>

더구나 1945년 2월 알타회담의 결과로 소련의 대일 참전이 임박하게 되자,<sup>71)</sup> 일본 제국은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 목적은 “1945년 가을에 있을 대동아전쟁의 완수[소련과의 전쟁]를 기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일본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어 그들을 최대한 전쟁에 동원하는데 있었다.<sup>72)</sup> 이에 호응하

6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inal Text of the Communiqué in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November 26,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pp. 449-450.

70) 좌담회, 『처우개선을 둘러싸고』(『국민문학』, 1945.1), 『좌담회로 읽는 <국민문학>』, 문경연 외 8명 편역, 소명출판, 2010, 646, 662면.

7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ocument 503: Agreement Regarding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in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February 11, 1945, *FRUS*, pp. 494-495.

여 이광수는 총궐기 대회에서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더 큰 싸움을 이기게 하자.” “내 생명 그것조차 바쳐 올리자”라며 조선인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였다.<sup>73)</sup>

하지만 일본은 조선인에게 전면적이 아닌 제한적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1945년 4월 1일 일본 의회는 조선인(과 대만인)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두 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15엔 이상의 세금을 내는 조선인 성인 남성-조선 전체 인구의 2.3%-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일본 귀족원 의석 7석과 중의원 의석 23석을 식민지 조선에 할당하였다.<sup>74)</sup>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참정권마저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한 번도 실시되지 못하였다.<sup>75)</sup>

일본제국이 식민지 조선인에게 도쿄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네그리에 의하면, 주권 개념은 유럽에서 전개되었다는 의미에서 유럽적 개념이자 지배의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국가-제국은 주권국, 비유럽 국가-식민지는 주권이 없는 국가라는 이분법이 형성되었다.<sup>76)</sup> 참정권-정치적 권리는 근대 주권의 법적 구현이기 때문에 식민지인이 참정권을 갖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 식민지인이 아닌 것이 된다.

72) 『第86回 帝國議會 衆議院 議事速記録 第19號』, 『官報』, 1945.3.19., 128面.

73) 이광수, 『모든 것을 바치리』, 『매일신보』, 1945.1.18; 김병걸, 김규동 편, 앞의 책, 18면.

74) 『第86回 帝國議會 衆議院 議事速記録 第19號』, 『官報』, 1945.03.19., 129面; 일본 의회는 세금을 15원 이상 내는 25세 이상의 조선인 납세자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납세자의 2.3%에 불과했다. 최유리, 『일제 말기 참정권 논의와 그 성격』, 『이화사원』, 28, 1995, 309-310면.

75) 이러한 선거권의 자격 제한은 일본이 처음으로 선거를 실시할 때를 참조한 것이다: 『第86回 帝國議會 衆議院 議事速記録 第13號』, 『官報』, 1945.03.23., 146面.

76)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중 역, 이학사, 2001, 149-154면.

이런 이유로 일본 제국은 조선인에 대한 지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참정권 부여를 거부하였다.<sup>77)</sup> 일본 제국이 1945년 4월 식민지인에 제한적 참정권을 부여한 것도 전쟁의 패배로 '식민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총력전 기간 동안 조선 문학자들은 징병제와 참정권의 교환을 목적으로 '국민문학'과 같은 일본의 전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인에게 징병제는 참정권 획득의 징표가 아니었다. 일본 제국은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바꿈으로써 반대급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문학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죽을 특권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즉 '죽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sup>78)</sup>

77) 일반 일본인들이 징병제 실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구분에 대한 상실을 우려해서이다. 당시 여론은 징병제가 남아시아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긍하면서도, 조선인의 불손한 태도가 증가하고 징병이라는 최대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참정권 등과 같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事法省刑事局, 『朝鮮の徴兵制施行の閣議決定公表に關する反響調査』, 『思想月報』, 95號, 1942年 6月, 20面.

78) 사카이 나오키는 일본제국의 식민지인에 대한 병역 동원, 특히 징병에 대해서 최근까지 거의 모든 국민국가는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국가를 위해 죽을 것을 명령하는 "죽음의 공동체"를 근본적인 면모(a fundamental feature)로서 갖고 있으며, 일본 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Sakai Naoki, op.cit. p. 515).

## ■ 참고문헌 ■

## 1. 1차 자료

- 『第86回 帝國議會 衆議院 議事速記録 第13號』, 『官報』, 1945.03.23., 146面.  
 『第86回 帝國議會 衆議院 議事速記録 第19號』, 『官報』, 1945.03.19., 128面.  
 『중학입학 시험의 체력 기준 작성-전력증강의 체육책』, 『동아일보』, 1939년 12월 15일  
 崔貞熙, 『野菊抄』, 『國民文學』, 1942.11, 131-145面.  
 金南天, 『或る朝』, 『國民文學』, 1943.1, 152-162面  
 金龍濟, 『壯丁』, 『國民文學』, 1944.8, 66-76面.  
 김용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매일신보』, 1943. 8.3.  
 李光秀, 『同胞に寄す』, 『京城日報』, 1940. 10. 1-10;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1997, 11-29면.  
 박태원, 『군국의 어머니』, 조광사, 1942.10.  
 서정주, 『隣保精神』, 『매일신보』, 1943.9.2.  
 서정주, 『스무살이 된 벗에게』, 『조광』, 1943.10; 『친일문학작품선집』 2, 실천문학사, 1986, 296면.  
 채만식, 『여인전기』, 『매일신보』, 1944.10.5-18.  
 崔載瑞, 『徵兵制實施の文化的意義』, 『國民文學』, 5, 6月 合号, 1942., 4-8面.  
 崔載瑞, 『轉換期の朝鮮文學』, 人文社, 1943.  
 香山光郎(李光秀), 『兵になれる』, 『新太陽』, 1943.11; 이경훈 편역,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1995, 평민사, 368-381면.

## 2. 2차 자료

- 加藤陽子, 『徵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東京: 吉川弘文館, 2000.  
 강영식 저, 『군부의 민족말살정책』,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이화대학교 출판부, 2008, 86-126면.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파시즘 체제하의 문학, 여성, 국가』,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2005, 71-114면.  
 近藤鈿一(編), 『太平洋戰爭下の朝鮮及び臺灣』, 巖南堂書店, 1961.8.

- 김동노,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의 독특성」, 『동방학지』 133집, 2006. 6, 199-242면.
- 김동명, 「일제하 ‘동화형 협력’ 운동의 논리와 전개-최린의 자치 운동의 모색과 좌절」, 『한일관계사연구』, 21, 2004.10, 151-185면.
- 김철, 「친일문학론: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광수와 백철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제8권 제1호, 1995, 6-24면.
- 김현주,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1920년대 전반기 이광수의 정치학과 문화론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14호, 2000, 11-45면.
- 御手洗辰雄 編, 『南次郎, 南次郎 傳記刊行會, 1957.
- 朝鮮總督府 情報局, 「(極秘) 朝鮮人に對する徵兵制施行準備に關する新聞發表案」(1942),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55, 민족문제연구소 편,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0, 421-456면.
- 陸軍省兵務課, “大東亞戰爭二件ヲ我カ人的國力ノ檢計”(1942)、15年戰爭極秘資料集、第1集; 高嶺隆治編, 東京: 不二出版社, 1987.7, 1-30면.
- 미즈노 나오키, 「조선 식민지 지배와 이름의 차별화: 재지인과 혼동하기 쉬운 이름의 금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Vol. 59, 2001.5, 147-175면.
- 방기중, 「1940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신체제 인식과 병참기지 강화정책」, 『동방학지』, 138, 2007, 97-152면.
-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2호, 2007, 231-279면.
- 事法省刑事局, 「朝鮮の徵兵制施行の閣議決定公表に關する反響調査」, 『思想月報』 95, 1942年 6月, 1-21面.
- 松岡修太郎, 「외지법」, 『행정법』, 1936, 3-5면; 이승일,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34, 2000, 77-78면.
- 송규진, 「일제하 참정권 청원운동의 논리」, 『史叢』, 62, 2006.3, 5-34면.
- 안태운, 「일제 말기 전시체제하의 조선여성에 대한 모성동원」, 『한국여성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7, 2000, 333-356면.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종 역, 이학사, 2001.
- 윤해동, 「식민지 인식의 회색시대」,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51-58면.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서울: 태학사, 1998.

- 이광수, 『민족적 경륜』, 『동아일보』, 1924.01.03.
- 이광수, 『의무교육과 우리의 각오』, 『매일신보』, 1940.8.28.;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 전집』 2, 이경훈 편역, 서울: 평민사, 1995, 89-90면.
- 이상경, 『일제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호, 2002, 203-241면.
- 이승일, 『일제시기 조선인의 일본국민화 연구』, 『동아시아 문화연구』, 34, 2000, 67-115면.
- 이준식, 『전시동원체제하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시 비평사, 2014, 259-266면.
- 김진균, 정근식 등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2003
- 임종국, 『조선민족 말살의 전략』,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286-313면.
- 임종국, 『친일문학론』, 서울: 평화출판사, 1966.
- 鄭飛石, 『國境』, 『國民文學』, 1943, 4, 60-65面.
- 鄭仁澤, 『かへりみはせじ』, 『國民文學』, 1943.10, 30-53面.
- 조동식, 松岡瑞林 등, 『징병령과 여자문제』, 『조광』, 1942.11, 67-75면.
- 朝鮮郡司令部, “第2號 委員會 協議決定 事項,” 1942.4.24. (수정 5.1), ORKB #1204-2; recited from Fujitani, Takashi,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 292
- 朝鮮郡司令部, 『朝鮮志願兵制度に關する意見』, (1937), 『密大日記』, 第4冊, 陸軍省, 1939, 1124-1168面.
- 朝鮮總督府, 『內鮮一體ノ強化徹底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諮問案 參考書』, 1, 1938.9, 1-78面.
- 朝鮮總督府, 『半島民衆ノ體位ノ向上及生活ノ刷新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諮問 答申案 試案』, 1938, 9, 113-132面.
- 朝鮮總督府, 『昭和16年度 陸軍特別支援者參考諸表』, 『第79回 帝國議會 說明資料』, 1941.2.
- 朝鮮總督府, 『朝鮮ニ於ケル參政ニ關スル制度ノ方策』(1930),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37, 민족문제연구소 편,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0, 203-253면.

- 朝鮮總督府, 『朝鮮同胞ニ對スル徵兵制施行準備決定ニ伴フ措置狀況並其ノ反響』 (1942.5),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55, 민족문제연구소 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0, 424-431면.
- 朝鮮總督府, 『徵兵制實施ニ對スル民情如何』, 『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4; 민족문제연구소 편,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v. 21,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0, 477-483면.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會議錄』, 1938, 1-559면.
- 지승준, 『일제시기 참정주의 세력의 ‘징병제요망운동’가 전쟁 협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12, 191-238면.
- 최유리, 『日帝 末期(1938年~45年)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5.
- 樋口雄一, 『戰時下の朝鮮民衆と徵兵』, 總和社, 2001.10, 99-108면; recited from Takashi Hujitani, Takashi,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p. 46.
- Fujitani, Takashi, *Race for Empire: Koreans as Japanese and Japanese as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 Janowitz, Morris, *Military Conflict*, Beverley Hills: Sage, 1975, p. 76; recited from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 234.
- Naoki Sakai, “Subject and Substratum: on Japanese Imperial Nationalism,” *Cultural Studies*, vol. 14, no. 3-4, 2000, pp. 462-530.
- Palmer, Brandon, *Fighting for the Enemy: Koreans in Japan’s War, 1937-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 Peattie, Mark R. “Attitudes towards Colonialism,”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ed. by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80-127.



<Abstract>

A Community of Death  
—a Feature of Japanese *Empire* Reflected on  
*Kokumin Bungaku* during the Total War Period,  
1938-1945—

Bae, Gae-Hwa

During the Japanese total war period (1938-1945), the Japanese empire introduced volunteer and conscription systems to mobilize colonial Koreans in the war effort. As a quid pro quo, however, the empire not only continued to deny Koreans political suffrage, but began to propagate that becoming an imperial soldier was not a duty but a right. The propaganda, conducted mainly by a literature called *Kokumin bungaku* (National Literature), called on Koreans to sacrifice themselves in the war in order to be a real Japanese imperial subject, implying that becoming a Japanese citizen was synonymous with having the privilege of dying for the Japanese empire.

Key words: Japanese empire, total war, conscription, suffrage,  
propaganda literature, *Kokumin bungaku*, imperialism

투 고 일 : 2018년 2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2월 26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